

F1 지원법안 국회 특위 심사 시작

“낙후지역 발전 동력...처리 급하다”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이하 F1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판적인 시각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반대 입장을 극복하는 게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이 법안 정점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전남도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논거 마련이 절실하다.

이날 오후 열린 소위는 국회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와 질의응답 설명, 문광부 보고에 이어 소위 위원들의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으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문화부가 F1대회의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F1 지원법 제정에 난색을

정책위의장 합의 사항...여야 입법 공감 문화부 난색·한나라 일부 여전히 반대

표시해 입법을 위해서는 문화부의 입장 전환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문화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이란 자료의 ‘국가 주도의 공공성 미흡, 낮은 사업 타당성, 타 기업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지원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와 맥을 같이한 것이다.

이해 대구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F1 대회로 돈을 벌면 대기업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낙후지역 발전차원에서 정부가 지원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입장에는 광주 출신의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도 거들었다.

특히 민주당 측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특별법안 개별조문을 살펴보니 독소조항은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발전의 모티브가 되는 지원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 지원 규모가 1천억여

원에 불과하고 법안은 공신력을 확보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지원법안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발의했고 지난 2월 국

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처리를 합의한 것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대회 일정 등 감안해 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부부지사는 “사업을 제3섹터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민자유치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였다”면서 “최근 경주장 시설 기공식을 마치고 2010년 첫 대회 개최를 앞두고 시일이 촉박해져 지원법 제정을 통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전남도에 정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산회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21일 오전 11시 법안소위는 연기됐으며 간사간 협의 등을 통해 향후 소위 일정을 잡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만 같아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광주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2층에서 열린 ‘희망행진 2009 어울마당’ 행사에서 장애인들과 관련단체 회원들이 풍선기둥세우기 등을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20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뒤 퇴장할 것”이라며 “동의안을 품으로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 동의안은 2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할 듯

민주당 “반대하지만 몸으로 막지는 않겠다”

운데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FTA 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진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는 민주당은 불참하고 자유선진당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22일 외통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월 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조기 비준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미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이 맞서왔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의 당내 의견수렴과 관련, “지난 일요일까지 들어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찬반이 팽팽하다”면서 “내용을 전부 집계한 뒤 정책위, 기획재정위 위원들과 협의해 처리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114km ‘도로 네트워크’ 자전거로 전국 어디든 가게

■자전거 인프라 어떻게 구축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자전거를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핵심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고자 강조함에 따라 정부의 자전거 인프라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 정책의 핵심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조2천456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총 3천114km 구간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인천 강화, 목포, 부산 해운대, 경북 포항, 고성 통일전망대를 돌아 행주대교 종점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일주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해안선과 접경지역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거대한 ‘자전거도로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월6일 발표된 녹색 뉴딜사업 36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등과 함께 포함된 데 이어 2월16일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전국을 자전거 생활권으로 묶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외에도 ‘U-바이크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자전거 산업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12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처럼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녹색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즉,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의 정책 지향점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다 자전거 도로 건설 등은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자전거 관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일본과 독일은 자전거도로가 각각 7만8천388km, 3만1km에 자전거 보급률이 67.8%, 87.3%이며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14%, 10%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9천170



km, 보급률은 16.6%, 교통분담률은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자전거 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25억 원,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345억 원, 자전거 타기 실천대회에 5억 원 등 모두 475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시범사업으로 172.5km 구간에 걸쳐 이뤄지며 지방비 50%까지 합하면 6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계별로 한강 311km, 낙동강, 519km, 금강 255km, 영산강 212km 등 모두 1천297km의 자전거 길도 만들어진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전거 시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으로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동반자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도록 ‘도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전거가 너무 느리게 달리면 넘어지듯이 ‘자전거 시대’도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뒤 “도심에서 안전하게 자

전거를 탈 수 있으려면 인도와 자전거 길을 서로 구분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전거 도난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하철과 연결하기 위해 외국처럼 맨 뒤 한 두 칸을 자전거 소지자 전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 시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제도도 손질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Greenstanding

OCI

OCI

OCI